

第245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3月2日(月)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남북이산가족의 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
2.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
가. 외교통상부
3. 남북협력기금사용에 관한보고
가. 통일부

審査된案件

2.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 1
가. 외교통상부
1. 남북이산가족의 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구두동의) 10
2.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계속) 13
가. 외교통상부(계속)
3. 남북협력기금사용에 관한보고 22
가. 통일부

(10시39분 개의)

○委員長 徐廷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지난 주말 북경에서 끝난 제2차 6자회담의 결과를 보고받고 통일부로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가 있으며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 및 확인과 관련된 결의안 1건을 채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남북이산가족의 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즉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석해야 합니다마는 潘基文 장관이 미국 일본과 제2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금일 오전에 출국하는 관계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崔英鎭 차관 그리고 직접 북경 6자회담에 참가한 李秀赫 차관보가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차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그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次官 崔英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林英鹿 다자통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2.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
가. 외교통상부

임 국장은 금번 고위공직자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외교부로 이번에 국장직을 수임한 것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6자회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회담 개요를 보고드리고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 입장, 회담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대처방향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차관, 이것은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한 차관보께서 회담 개요를 얘기하면 그 도중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바꾸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曹雄奎 간사님이 그런 뜻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外交通商部次官 崔英鎭 그러면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예, 그렇게 하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李秀赫 차관보입니다.

그러면 제2차 6자회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북경 조어대에서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담에서는 네 차례의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회의, 차석대표회의, 남북, 미북 등 양자협의와 한·미·일 3자협의를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폐기, 대북 안전보장, 핵동결 대 상응조치, 회담 정례화 및 실무그룹 구성 문제 등에 대한 참가국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금년도 2/4분기 내에 북경에서 제3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참가국들은 회담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핵문제 해결과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조율된 상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합의사항은 회담 마지

막 날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폐기에 대한 각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각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잠정적 안전보장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상을 참가국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대북 불가침 약속을 제시하는 선에서 안전보장문제를 언급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曹雄奎 委員 6자회담 직전에 우리 정부가 3단계 해법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 있었지요? 그 3단계 해법이 어떤 것들이에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제1단계는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여타국은 안전보장을 해 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핵폐기와 검증에 대해서 여타국들은 상호조율된 조치를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핵폐기가 완료되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포괄적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曹雄奎 委員 그러니까 이번 6자회담 전에 한·미·일 간이라든가 혹은 한·미·일·중·러 간에 이 3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형성했었어?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이번에 3단계라고 하는 것을 2차 회담에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제1차 회담에서 제안된 안이었습니

다. 제1차 회담에 앞서서 가진 한·미·일 또는 한미, 한일 협의과정에서 우리 3단계 안을 제안하였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각각 한·미·일 3국은 우리 안을 기초로 미국 안을 만들었고 일본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안이 가장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그런 안을 제1차 6자회담에서 제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희 안이 단독으로 만들어진 안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양해를 받은 또는 동의를 한 그런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曹雄奎 委員 정부는 그렇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괜히 3단계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체계에 불협화음을 가져오지 않았나, 미국은 우리의 3단계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CVID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도리어 원만한 회의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그런 불필요한 한·미·일 간에 불협화음을 내는 일은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저희가 1차 회담 때 제안한 한국의 3단계 방안은 미국, 일본과 약 2, 3개월의 밀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제안하는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을 기초로 해서 미국은 그보다는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 안을 내놓았고 일본도 역시 우리와 아주 유사한 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1차 회담에서 우리 안을 상세하게 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상세안을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일본과 이 문제에 있어 균열이 있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曹雄奎 委員 계속하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다음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 입장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중국은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과 폐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회담이 파국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曹雄奎 委員 다시 묻겠는데, 북한은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2년 10월 켈리가 방문했을 때 있다고 그랬고 그 후에도 있는 것처럼 하다가 이번 회담에서는 회담 며칠 전부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일단은 정보를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하면 해명을 하겠다, 없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회담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미국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또 최근에 칸 박사가 고백한 것, 자백한 것 등을 가지고도 충분히 북한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VID의 C인 컴플리트(Complete) 속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라는 것이 고농축우라늄 문제 때문에 개최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칸 박사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벌써 2002년 10월에 이 문제 때문에 제2차 핵위기가 전개되었고 그 이후에 3자회담과 6자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작년 4월에……

○曹雄奎 委員 그것은 아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유독 이번 회담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것은, 농축우라늄 폐기 문제가 제1의 의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한 것 자체는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曹雄奎 委員 해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부인을 해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다만 그것은 북한이 지금 이 단계에서, 회의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때에 시인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끈질긴 협상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북한 자신도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북한 김계관 수석대표하고 회의 전날 저녁에 남북한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

고 우리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김계관 부상이 반박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曹雄奎 委員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다음은 핵동결 대 상응조치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결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 핵물질과 관련시설들을 포함하고 이를 검증하며 핵폐기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CVID 실현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핵동결 대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담결과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회담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 10월 핵문제가 다시 대두된 이후 최초로 관련국 간 서면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원칙과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6자회담 과정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참가국들이 차기회담 개최와 실무그룹 구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대화과정을 안정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차기회담을 2/4분기 내에 북경에서 개최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회담 촉진자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회담에서 실질문제 협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회담에서는 CVID 문제, 핵동결 대 상응

조치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차 회담에 비해 토의 양상이 진전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핵폐기 및 동결의 범위, HEU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라고 인식됩니다.

셋째, 회담의 진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 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한·미·일 공조하에 회담 진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남북 자협의를 통해 북한 측에 핵폐기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회담 기간 중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파월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문건 채택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2차 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미국 일본 측과 대처방향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금번 미국 일본 방문 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협의할 것이며, 2차 6자회담에서 제의한 우리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일 공조와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3차 회담과 실무그룹 회의를 적기에 개최토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타 참가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曹雄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마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북한이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과 군사용과 평화용으로 구분해서 평화용 핵개발은 계속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평화용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네요, 그 전부터 북한이 사용했던 개념이네요? 그리고 평화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긍정적인 평가에 대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는 이번 결과가 부정적이었던 내용도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번 회담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했었던 안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상당기간은 이 계획이 없다 하고 계속 부인해 갈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비록 실무회의에서 또는 제3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상당기간은 부인을 해 나가면서 퇴로를 모색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 이용의 핵동력 발전도 자기들은 동결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핵동결 제안을 낸 이후에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평화적 이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술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화적 이용 부분, 그것은 해석하건대 지금 폐연료봉을 빼내고 있는 5MW짜리는 평화적 이용으로 동력을 거기서 빼내고 있다는 이유에서 계속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것은 한·미·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하는 전술적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MW짜리는 이미 94년도 제네바합의에서 폐기하기로 합의한 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은 이번에 제외하겠다는 하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킨다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보상의 수위를 조절하는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 김계관 부상이 저한테도 양국 접촉에서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시비를 걸지 않았습시다. 너무 명명백백한 것을 가지고 카드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말려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曹雄奎 委員 결국은 지금 문제가 북·미 간에 어떤 신뢰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핵문제라는 것이 지지부진해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아울러 북한은 비밀리에 계속 핵개발을 추진해서 상당한 양의 핵을 어느 시점에서는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정부는 미국이 유연성을 앞으로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CVID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북한이 우선 핵문제에 대해서 완전포기를 한 다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동시이행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런 개념 속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지금 사실 우리가 표현은 북·미 간의 신뢰부족이라고 하는데 북한과 여타 5개국 간의 신뢰부족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지지부진하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결을 빨리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동결조치를 취하고 사태악화를 방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CVID에 대한 합의문안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CVID의 근본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까지 이루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이미 제안도 했기 때문에 핵동결을 수용하자. 그런데 핵동결도 북한이 의미하는 핵동결이 아니고 매우 엄격한, 저희가 얘기한 세 가지의 매우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핵동결을 시키자.

그러면 앞으로 CVID 회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요구한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개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을 검토해서 핵동결이 시작되면 에너지를 지원하자 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북한의 검토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지금 저희가 제안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 지지해서 자기들도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2차 회담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안을 설명하고 2차 6자회담에 와서 지지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지지안을 가지고 나와서 본회담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느냐, CVID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해결되겠느냐?

CVID 고수는 미국만의 입장이 아니라 한·미·일의 공동된 입장이고 중국도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CVID 입장은 미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도 반드시 CVID 방식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V(Verification)하고 이리버서블(Irreversible),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역적인 방법으로 검증해도 안 되고 또 검증 자체가 부분적인 검증을 해서도 안 되고 완벽한 검증이어야 된다는 데 북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 컴플리트(Complete) 부분에 있어서 농축우라늄 부분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저희가 제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曹雄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李 차관보의 판단으로는 미국 대선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몇 %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미 대선 전에 해결 가능문제 또는 미 대선이 핵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첫날 회의를 할 때 저한테 미국 대선이 미칠 영향을 문의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단간의 의견, 영향이 있다 혹은 영향이 없다, 대선 때문에 강하게 나갈 것이다 혹은 대선 때문에 약하게 나갈 것이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기에 제가 바로 그 점으로 봐서, 양단의 분석과 평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대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차기에 부시가 안 되고 케리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른 안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해결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대선 전에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가능성을 문의하셨는데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지금……

○曹雄奎 委員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소신껏 얘기해 봐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9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있든 없든 9개월 사이에 CVID 합의안이 만들어지겠느냐, 설혹 어느 정부의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1년이 안 되는 9개월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또 고민이 있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다음 유재건 위원님!

○유재건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중차대한 소명을 띠고 결연하게 회의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인데요.

보고서 첫 쪽의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조율된 상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북한을 빼놓고 나머지 다섯 나라가 조율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이 용어가 coordinated steps를 이렇게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동시행동원칙, 우리는 병행원칙 또 미국은 때로 sequencing steps, 지난번 1차회담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혼재된 용어들을 사용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는 coordinated steps, 상호조율된 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미·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북한도 이번에 수용해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나머지 5개국 특히 한미 양국, 또 일본도 포함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것은 북한 핵 폐기의 과정과 수준을 보아가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1차회담 때 용어들이 산재해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들이 두 번째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정리된 것입니다. 제가 동시이행행동이라는 말을 양자 접촉에서 자꾸 강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 북한도 실제 협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대화를 통해서 용어 자체도 합의를 보고 조율된 것은 발전 지향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보고하신 대로 또 자평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 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차회담과 2차회담을 볼 때 1차회담 때는 TCOG 미팅도 있고 하지만 역시 우리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라고 그럴까, 설득하는 것과 협의하는 것들이 많이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내용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고 오고 일본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마치 시험공부할 때 준비 많이 한 사람들이 자신 있듯이 李秀赫 차관보가 회의 참여할 때부터 전보다 훨씬 자신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와 협의 또 이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 간에 접촉

을 많이 하고 얘기를 듣고 민간지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국민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쓴 것들이 회의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완전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2/4분기 안에 3차 6자회담을 열기로 한 것, 실무자회의를 하기로 한 것들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는 역시 준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미국이 CVID를 느슨하게 변화한다든가 그 안에 해결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2/4분기의 3차회담 때도 한국 측에서 적극성을 띠고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또 한 발자국 나서는, 핵 폐기는 완전히 끝이 안 나더라도 전 세계에 핵동결도 선언하고 이쪽에서 지원도 자꾸 하면서 6자회담 시작 때부터 진전된 것이 가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한 스텝이라도 이 다음 3차회담 때는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차이점을 감안해서 더욱 분발해서 사전조율과 가고 오고, 협력하는 것 또 국민의 얘기를 듣는 것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애썼습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孟亨奎 위원님!

○孟亨奎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2차회담은 1차회담 때와는 달리 3차회담 일정과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을 일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협상 틀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여부와 폐기의 대상 등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북·미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사안에 대한 해결 없이 문제를 실무회담으로 넘겼습니다. 핵문제 해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협의 채널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실무채널의 임무를 정한다고는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지침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실무채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위원님 질의에 우선 형식에만 합의를 했고, 절차적인 문제만 합의를 했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과라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정도만 합의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회의는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1차회담 때는 2차회담이 개최된다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2차회담은 시한 내에 합의를 했고 더욱더 중요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북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회담이 나흘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테이블 위에 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적어도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북한이 명백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특히 나머지 5개국이 북한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북한대표가 북한 고위층에 보고하고 다시 정책을 수정해 가는 이런 과정의 측면에서는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실무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실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핵무기 계획 일부를 다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나오고 핵무기 계획, 핵계획이 완전히 포기돼야 되는, 완전한 포기를 북한이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를 본다든지 여타국의 정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회담은 낙관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무회의에도 임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벌써 가지고 있고 이번에 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미국과 일본에 가셔서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안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 계획을 좀더 정교화시키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이번 2차회담이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까다로운 북한을 상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쉽지 않은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긍정적인 평가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에 워킹그룹 신설 등을 결정함에 따라서 6차회담 틀의 유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분명히 평가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본질적인 문제들,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인 핵 폐기와 동결의 원칙과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북한의 협상전술에 의해 혼선이 가중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미국의 CVID에 대해서 북한은 군사용 핵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평화적 핵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요.

또 미국이 농업이나 의학용 저농축우라늄 보유는 인정한다고 하니까 북한은 원자력 발전도 허용해야 한다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북한 특유의 협상 전술인 살라미 전술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전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여론이나 언론에서 CVID를 자꾸 미국의 CVID라고 말씀하시는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CVID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지 않고 불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검증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도 검증 있는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리버서블을 북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VID는 C가 문제인데 북한만이 불완

전한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CVID가 아니라 국제사회, 좁게는 회담에 참가한 나머지 5개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너무 미·북한 간의 대결로만 보시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군사적 원자력 이용과 민간 평화적 이용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살라미전술이라는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평화적 이용 부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문제를 같이 맞장구 쳐서 옳다 그르다고 하면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핵 폐기라고 할 때 완전 속에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회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부분은, 진실된 평화적 이용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NPT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업, 의학 이런 것의 평화적 이용을 부인한 바도 없고 다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孟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5MW짜리를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수로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워킹그룹과 본회담에서 다시 걸러지고 확인하고 우리가 입장을 관철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논리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委員 이번 회의과정에서 정부가 동결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북한은 합의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이를 일단 위반하거나 불이행했다가 그 합의를 다시 쪼개서 재차 보상을 받고 이행을 조금씩 하거나 다시 위반해 합의이행 지연을 통해서 재차 보상을 받는 고도의 전술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핵 폐기 이전에도 에너지를 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이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거의 떠맡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인 신중함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일반인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 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결 대 상응조치하는 방법으로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핵 폐기를 하는 안을, CVID 합의를안을 만드는 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어떤 통제되는 레짐(regime)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상황관리를 위해서 핵 동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동차를 뒤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지하는 풀 스탑(full stop)하는 완전한 정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동차의 경우에 그 시간은 1초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또 운전이 익숙한 사람은 10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동차가 뒤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는 정지가 필요합니다. 그 정지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핵 문제에 있어서는 동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에 뭘 하느냐, 뒤로 후진하는 레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동결의 조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스코프(scope) 즉 범위는 완전해야 된다,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결을 해야 된다. 베리피케이션(Verification), 엄한 국제사찰을 다 적용해서 동결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간, 기간은 제네바합의 같이 경수로 기간이 다 끝나는 7, 8년 나중에 10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연 단위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VID 합의를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만 잠정적으로 동결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결을 할 경우에는, 동결이 시작되면 북한이 보상의 하나로서 에너지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두 가지는 미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6자회담에서 6개국이 합의할 얘기는 아니고 미·북한 간에

합의될 문제이고 미국 법령의 문제이고 미국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개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지원 부분입니다. 에너지 지원이 앞으로 CVID 합의를안을 만들 때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한다면 정지되어 있는 핵동결 기간에, 완벽한 핵동결이 되고 있는 동안에만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지원은 CVID가 만들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coordinated steps를 정할 때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이고 조건이 매우 엄한 동결을 이행할 때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그동안 약 2~3개월 동안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안에 동의를 했고 미국과 일본은 지지와 이해를 표명했는데 양국은 국내적 사정으로 동결 때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다자회의라는 점에 있어서 6개국 중 어느 국가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부담, 의무는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다자회담에 유념하면서 가능하면 부담 부분도 회담에 참여하는 6개국이 공히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국 간의 국내적 정치상황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막하게,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계획에 관한 확고한 정보를 갖고 있고 HEU 보유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또 북한은 HEU 핵계획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거증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도 정보를 갖고 있다면 조속히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당국이 지난 1월 미 방북단에 HEU 핵계획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국 전문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우리 정부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찾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정보공개문제인데,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Intelligence Information) 문제에 대해서는 소스의 보호문제,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외에 파키스탄에서 수사 중인 칸 박사의 북한과의 연루설, 이 수사결과가 나오면 매우 중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가 완료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그 시점부터는 지금 같이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역시 파키스탄의 이러한 정보 제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커 박사가 갔을 때 관련 국가 간에 전문가 회의를 하자고 한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므로 6자회담 틀 내에서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6자회담과 별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이 바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孟亨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됐는데 자꾸 나가시니까 실무자들이 불안해 가지고, 또 유재건 위원님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상정시켜서 의결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구두동의)

(11시26분)

○**委員長 徐廷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위원회는 이산가족의생사확인등을촉구하는결의안을 세 차례, 1991년 1998년 2000년에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고통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고령이 되어서 자꾸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남북당국에게 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확대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容九** 전문위원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과거의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단절과 격동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이 20세기 냉전의 잔재로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남북 간에 여덟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의 상봉, 1만 8939명의 생사·주소 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건설에관한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상봉, 상호 왕래 및 재결합 등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간에 흩어진 수백만 이산가족들의 생사 여부 및 주소 확인이 가장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며, 지난 1991년 2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 1998년 12월 남북이산가

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 2000년 6월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 등 대한민국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채택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위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 왕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으로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廷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혹 질의하실 위원님……

○金容甲 委員 예.

○委員長 徐廷和 金容甲 위원님!

○金容甲 委員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이 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결의안을 통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왔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이 시점에 제출한다든지, 또는 왜 전문위원이 저기 와서 설명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專門委員 金容九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관련……

○金容甲 委員 전문위원이 답변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徐廷和 전문위원은 위원이 아니기 때

문에 초안으로써 제안한 것뿐입니다.

○金容甲 委員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이 제안해도 되는 거예요?

○委員長 徐廷和 초안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委員長 徐廷和 예.

○金德龍 委員 위원장님, 저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왜 굳이 이 시간에 갑자기 이런 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기적인 급박성이라고 그럴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6대 국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결의안을 내는 주체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金容甲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저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연례적으로 한 번씩 해 보는 정도의 의미로 하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할 만한 현실적인 절박성이라든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金容甲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저 자신도 ‘왜 지금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저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朴寬用 의장의 간곡한 초안 제안을 받고 작업한 姜 수석이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容甲 委員 姜 수석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朴寬用 의장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이든, 지금 당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았지, 의장이 직접 전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전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제안하라고

하면, 국회 절차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의장이 마지막에 이런 절차에도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소위 결의안이 통과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반대는 안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徐廷和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라도 金容甲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金德龍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徐廷和 말씀하세요.

○유재건 위원 이것은 제 개인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전당에서 제 개인 얘기는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이산가족 신청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만 몇천 명으로 나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5만 명 이상이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덟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 기천 명이 만나고 편지 교환을 하고, 만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생사라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저희 방에도 많이 오고 아마 국회의장 방이나 위원장님 방에도 많은 문의가 갔을 겁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별로 일을 잘 못 했다고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 마당에 그저 위원장님이 제안하셔서, 내용이 괜찮다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양해말씀도 있었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절차를 나중에 밟으시기도 하고 설명도 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향해서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 당신들은 이런 것을 도울 수 없느냐 이런 문의를 개인적으로도 받고 또 저는 그 중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통과를 찬성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요는 상임위 내에서 제안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회의장님 말씀도 나오고 있지만 나는 우리 徐廷和 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해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상은 그런 절

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徐廷和 위원장 아니면 여야 간사 중에 두 분이 한다든가 해서……

○柳興洙 委員 제안자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됐지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결의하기 바랍니다.

○曹雄奎 委員 이 결의안이 네 번째인데 저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산가족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통일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결의안에 준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결의안이 초안될 때 국군포로라든가 납북자라든가 또한 납북어부들에 대한 생사 확인이나 주소 확인 정도는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간접적으로 건의했었는데 여기에 문안이 맞지 않아서 더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산가족 못지않게 국군포로, 납북자들, 또 납북어부 등등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를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최소한 생사 확인이라든가 서신교환 정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대답을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말씀하신 대로 국군포로 문제는 그동안 당국간 회담 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에 2002년 5월로 기억합니다마는 당시 한나라당의 朴槿惠 의원이 유로코리아재단의 이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아, 그 문제도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약속했다고 북한 접촉 결과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朴 의원 자신이 언론에 공표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9월에 5차 적십자 총재급 회담에서 그 문제를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후에 열리게 되는 연례회담을 통해서 매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북쪽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전후 남북자에 대해서 항상 당국간 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우선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서 북쪽의 전향적인 실질적 조치를 먼저 끌어내고 그다음에 남북자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거론하는데 참 어려운 점은 북쪽이 그런 시민사업, 사람을 찾는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원이 뒤따른다면 진척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 지역에나마 설립되고 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편물 교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면 이것을 들고서라도 제가 북쪽을 압박한다고 그럴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 하는 식으로 촉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제안서를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핵관련6자회담결과보고(계속)

가. 외교통상부(계속)

(11시45분)

○委員長 徐廷和 그러면李 차관보 다시 발언대 앞에 서시고 金德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6자회담에 대한 평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孟亨奎 위원님께서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두고 자리를 함께하고 대화를 가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이상의 성과는 지금 없지 않느냐,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든가, 북이 조건부 핵동결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가지고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진전에 따라서 발전적인 것으로 갈는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항이 될는지 여부가 앞으로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때그때 조그만 일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자꾸 변명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냉철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랄까 나가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이한 사고, 낙관적인 사고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알고 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쯤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굳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李秀赫 차관보 개인적으로는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이 첫날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핵 활동을 제외한 핵무기 계획 폐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북한의 계략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군사적 목적의 핵 활동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핵 활동을 구분하지 않다가 갑자기 구분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 활동의 모호성을 갖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과정에서 2개, 몇 개 단계로 나눔으로 해서 사실은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위 HEU 핵 프로그램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처음부터 그런 의사도 없었지만 계획도 아예 있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문제의 핵심은, 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HEU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HEU 부분은 리비아의 선언과 파

키스탄의 여러 사정에서 거의 근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미국이나 세계 각국이 북한을 여전히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북한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령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차라리 앞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신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마저 부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한번 같이 해 보자고 북한이 꼬리를 뺐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앞으로 핵문제 해결에 지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핵동결 시의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폐기가 없는 한은 어떤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분명히 입장이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협상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필요한 경우 북을 도와야 하는데 지금 일본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폐기 없는 동결에서는 에너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상할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과 일본이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넘어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아니라도 지금 북한에 지원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결의안을 냈습니다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굶주리고 있는 북한 국민들에게 식량이라든가 또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라든가 그 외 의약품이라든가 핵 관련이 아닌 다른 민생이라든가 또 나가서 철도 연결이라든가 공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현재 국가의 경제 사정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부담을 해야 되

는데 지금까지 에너지 지원을 담당했던 미국이 하지 않고 또 앞으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는 일본이 그것을 외면했을 때 한국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기 전 동결 시에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의 성과로서 평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워킹그룹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워킹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킹그룹을 설치한 의도가 각국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마 한반도에서의 자기들 영향력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아닌 한반도 문제를 우선적인 국제적 관심사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외교적 실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은 워킹그룹을 설치해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자기들 보상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 중에 워킹그룹,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핵동결에 대한 사찰 실무팀 만드는 논의 그리고 에너지보상 실무팀을 만드는 논의 또 그 외에 경제지원 실무팀을 만드는 논의,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HEU 핵개발 보유와 관련된 실무팀 구성은 지금 큰 틀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북한 지원쪽에 방향을 맞춘 실무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합의된 소위 워킹그룹의 구체적 팀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로 과연 이 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차회담, 그리고 회담의 정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야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담의 정례화는 물론이고 가까운 3차 회담마저도 막연히 4월 혹은 6월 이런 식의 공감대밖에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가장 중요한 협상국 중의 하나인 미국이나 북한이 이 회담에서 무엇인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흔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각자 처한 환경 때문에 적당히 대화를 하는 체하면서 시간이나 끌고 가자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분명하지 않고 어쩌면 그쪽으로 그들의 생각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회담에 전력할 수도 없고 또 그 외에 이라크문제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문제까지도 민감한 선거기간 동안에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서 잘 풀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북한 태도로 볼 때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큼의 그것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대화 정도 하면서 그냥 끌고 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은 더욱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대선을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벌기를 해 보자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얻어내고 자기들의 정치선전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핵문제에 의해서 제2차 큰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쩌면 스스로 시간을 벌면서 핵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핵보유 선언으로 기득권 국가로서, 핵 국가 열차의 탑승자로서 더 큰 대가를 바라는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자로서 핵을 보유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

은 시간끌기식의 6차회담, 핵 회담을 과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는 결코 작게 평가하고 싶지 않고 진전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끝낸 이 회담을 절반 정도 성공했다는 그런 낙관적이고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특히 유념하고 많은 질의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질의는 이미 孟亨奎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서 답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의 목적이 군사적, 비군사적 구분을 해서 핵 활동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 이것은 결국 협상에서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는 전략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孟亨奎 위원님께서 이런 이유에서 실무회의가 공전이 될 가능성을 지적해서 제가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확고하지 않고 이 회담에 임하는 한 회담은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나 미국만의 압박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과거 북한의 맹방 또 아직도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압력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살라미 전술에 한미가 응해서 이에 부화뇌동할 입장이 아닙니다. 기필코 그러한 것을 전술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였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던 것이 이번에 제안한 핵동결 대 보상안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역시 같은 맥락인데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인정하고 갔더라면 북한의 신뢰에 도움이 됐고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고 합의도 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옳으신 지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한테 계속 고농축우라늄 문제의 해결을 우회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 이상은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농축우라늄 문제 해결을 안 하겠다 하면 6자회담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6자회담은 고농축우라늄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플루토늄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만든 목적이 고농축우라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지원과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지원하기 위해서 동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동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핵 폐기로 가는데 핵 폐기안 CVID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상황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작년 10월 이후로 6자회담이 열리고 하는 사이에 북한은 재처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플루토늄 다 만들었다, 핵억지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고 한 것이 이것을 장악할 레짐이 없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합의될 때까지 사태를 장악하기 위해서 핵동결이 필요합니다. 핵동결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CVID 구체안에 합의해야 됩니다.

다만 동결 자체를 핵폐기의 시작으로 보고, 어쨌든 동결해야 폐기가 가능하니까 시작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에너지 지원을 요청했으니 CVID 합의안을 만드는 인센티브로서 이것을 수용해 주자,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핵동결 조건하에서의 핵동결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조건, 즉 범위 검증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도 매우 단기간 동안에만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6자회담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6개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머지 5개국이 다 참여하는 또는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동참의 의미에서 우리의 에너지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金德龍 委員 李 차관보, 그러니까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선언하기 이전이라도 핵이라는 것은 동결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에너

지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핵동결을 시작하면 북측의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金德龍 委員 우리가 에너지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의 에너지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과 관련한 에너지 지원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유제공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핵폐기를 완전히 선언하지 않는 한 그런 보상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핵동결도 핵폐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 단계니까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담하에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확정된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우리만 부담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金德龍 委員 아니, 현실적으로 미국 일본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는 두 나라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그 뉘앙스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金德龍 委員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폐기 전에는 보상이 없다고 분명히 했고 일본도 틀림없이 같은 길을 갑니다. 일본이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일본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겠습니까, 러시아가 대겠습니까? 솔직히 이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그동안 해 오던 지원은 할지 몰라도 핵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댄다면 우리가 대는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핵과 관련된 에너지 지원까지도 우리 정부가 한다고 해야 하는가, 한다고 결정이 되었는가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정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겠다든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이 회담은 6자회담입니다. 다자회담입니다. 저희 혼자만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동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6자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만이 제공하게 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부담을 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다자회담인 한 책임과 권리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어느 1개국만이 지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회의에서 밝혔고 이러한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워킹그룹은 보상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워킹그룹은 핵폐기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룹입니다. 전문가 그룹입니다. 현재 워킹그룹에 핵동결을 다루는 팀, 사찰을 다루는 팀, 보상을 다루는 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 아무 계획도 없고 현재는 차석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워킹그룹 하나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회담 정례화 문제인데 1차 회담 때는 2차 회담의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6월 이내라고 뜻을 박았습니다. 6월 이내에 열려서, 설혹 6월 중순에 열린다 해도 3개월 반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1차 회담부터 2차 회담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2개월 안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타협안으로 6월 이내라는, 2/4분기 이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물리적으로 1차와 2차 사이보다는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별기 전술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시간별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시간별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 정도가 아니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우리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 왔고 그 적극적인 안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이러한 시간별기, 우리는 시간이 급합니다. 회의장에서 어느 국가가 6개월에 한 번씩 열자는 안을 제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박을 받았습시다. 시간별기 작전에 우리가 끌려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긴박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낙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이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에,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마지막으로 핵보유 선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저희는 지금 모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일시적으로 흘렸었던 얘기에 일일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적 이용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공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전술에 우리가 끌려들어가서 그런 데다 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내가 질의한 것은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만일 핵보유 선언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장,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정부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사태악화를 염두에 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에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헤커 박사가 갔을 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현명하게도 그러한 북한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핵보유국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다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委員長 徐廷和 秋美愛 위원님!

○秋美愛 委員 북한이 회담 전에 평화적 핵동력 부분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예.

○秋美愛 委員 지금 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는 것은 핵무기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 계획에 국한해서 폐기대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말이 군사목적으로 한 것만 폐기를 하겠다, 평화적 핵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지금 북한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핵동력이라는 평화적 핵 이용까지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입니다. 이번에 김계관 부상은 정부입장이라고 하면서 핵무기만 대상으로 해야지 평화적 핵활동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는 5MW짜리는 계속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5MW 원자로 이미 제네바합의에서 폐기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다 동의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 주장을 하는 것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孟 위원님 지적대로 살라미전술로 나중에 보상을 받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미·일은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秋美愛 委員 왜 북한이 이렇게 대화국면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왜 바꾼 것 같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핵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네바합의 플러스 알파가 이번 6자회담의 목적입니다. 제네바합의 때의 것도 이루지 못하는 수준의 6자회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합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秋美愛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계를 잘 아는 북한이 왜 새삼 그 주장을 해 오는가 말입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북한은 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만 하지는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아니, 그 말이 아니라……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협상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한 협상의 전술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秋美愛 委員 그러니까 보상을 더 얹어 달라 이런 것인지, 실마리가 풀려야 보상을 더 달라고 얘기해볼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실마리를 못 풀게끔 잠금장치처럼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의 ‘완전한’에 있어서 HEU에 대해서 미리 밝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라 하는 미국 측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의 그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든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물론 한·미·일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대화로 하자 그러면 대화가 자꾸 진전이 되게끔 중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균형된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그러한 분석도 좋은 분석입니다. 한·미·일이 요구하는 농축우라늄 문제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카드를 내놓고 그것에 몰두시키는 전술이라는 분석에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秋美愛 委員 그렇다면 ‘완전하고도’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동결 대 보상이라는,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대화의 원스텝마저도 미국이 거부하고 있고 북한이 더 어긋난 방향으로 후퇴를 해 간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완전하고도’를 ‘모든’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예.

○秋美愛 委員 그랬을 때 미국이나 여타 참가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이 문제는 사실은 본 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모든 핵 프로그램 또는 한·미·일 협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된 얘기입니다. 저희는 보상이란 말은 쓰지 않고 북한도 보상이라는 말을 자제하겠다고 하므로 상응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응조치라는 말로 요즘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결 대 상응조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했다면 저희가 2차 회담에서 제안을 하지 않도록 저희한테

적극 권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동결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간의 의견균열이 아니라……

○秋美愛 委員 그러니까 동결대상에 대해서, HEU에 대해서 미국이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있다고 시인해라 하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지요.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기에 대화의 실마리를 못 푸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포괄적인’이라든가 ‘모든’이라는 완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표현을 권장했을 때 미국이나 주변국의 반응이 어땠느냐?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한국 측의 제안, 즉 ‘완전하고도’를 ‘모든’이나 ‘포괄적인’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한국 측의 제안에 더 이해와 협조를 해 준다면, 또 미국 쪽도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북한도 한 발짝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저희가 지금 핵동결 과정도 미국하고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과정보다는 목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秋美愛 委員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완강하군요. 좌우간 완전해야 된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완전한 핵폐기를 해야 된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칸 박사가 자백을 했다고 계속 그리고 청문회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국 측에도 제공을 해 주고 해서 한국 측이 다 알면서 ‘완전하고도’에 동의를 하든지 일사불란하게 일치를 해야지 한국은 중간적인 말을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께서는 미국의 방문단이 영변과 그 주변시설을 다 방문하고 그 결과를, 청문자료까지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장관께서는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정보가 없으면서 애매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미국하고 확실한 정보공유를 하고, HEU가 있다면 북한을 확실하게 다잡아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빨리 대화를 풀게끔 미국이 언제까지 증거를 제시하라, 안

하면 없다고 보겠다 그러고 빨리 그 다음 단계를 취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좀 그것을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끌어가야지 북미가 양쪽 다 애매하게 외교적 발언만 하는데 정보가 없이 우리도 그냥 애매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金德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혹시나 대화 분위기를 놓칠까봐, 우리가 괜히 현재의 분위기를 깨기 싫으니까 중유제공을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겠다, 뻔한 것 아닙니까?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의 성의 표시하는 정도겠지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유지해 나간다는 데 도움이 되니까 반대하지 않겠다, 반대하지 않겠다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국이 증거도 안 들이대고 계속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또 없다고 하고 그렇게 팽팽히 맞서는데, 그러면 같은 동맹국이라면서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일치된 견해를 요구하든지 해야지 정보도 안 주고 무슨 일치된 견해인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HEU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애매하게 가지 말고 “빨리 자백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래야지 무슨 애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협상전략이 잘못된 것이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아까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CVID는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한·미·일의 정책입니다. 공조된 정책입니다. 혹자들 또는 언론에서는 CVID는 미국의 정책이고 우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HEU가 어떤 초보적인 구상단계 또는 실험단계입니까? 아니면 좀더 무기화할 수 있는 무서운 위험한 단계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HEU 프로그램의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알고는 있는데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한 판단은 북한은 농축우라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秋美愛 委員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단계와 관계없이 그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6자회담의 목적입니다. 6자회담이 플루토늄 계획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체네바합의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것이 농축우라늄 계획입니다. 농축우라늄 계획이 없었으면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秋美愛 委員 그것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 그 의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실재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살살 달래서 어떻게든 있는 것을 검증하고 빼내고 더 위험하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자꾸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전에 보니까 그 계획의 번역이 잘못되었다,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개발 단계별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불확실하게 한글에 대한, 한국말에 대한 영문번역 통역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것이 이미 실험단계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면 확실하게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용납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경계할 만한 의사, 나쁜 의도 정도라고 한다면 자꾸 유인해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지금 저희가 핵개발 계획이라고 할 때 계획은 의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시설, 물질, 무기를 다 종합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완전하게 일치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CVID는 미국만의 입장이고 한국이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일 간에 합의된 우리의 핵문제 해결의 지침입니다.

○秋美愛 委員 러시아나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견해와 일치합니까, 좀 다른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중국 역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서 매우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키스탄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중국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도 이 계획에 대해서 회의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능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6자회담에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볼 때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에서, 그 존재의 회의적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秋美愛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이부영 위원님!

○이부영 위원 그동안 끈질기게 6자회담이 성사 되도록 애써왔고 또 이번 2/4분기 중에 3차회담을 갖도록 하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서 높이 성과를 치하합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6자회담 내지는 미북관계 전망이 지난 연말 1차 6자회담이 열리기 전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이 있지요?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현재 우리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찬성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미국과의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책조율을 하는 데도 좋은 조건을 조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울러 미국 내의 올 대통령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미국의 민주당 켈리 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미·북대화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정권이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에 소극적 내지 방관적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도 미국으로 하여금 올 안에 완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이라크 사태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진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이끌어 가고 또 주선하고 뒤에서 실무적인 뒷받침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대단히 활동공간이 넓어진다, 우리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고 또 미국과 중국과 우리 사이의 협조 내지 공조할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이

렇게 6자회담을 둘러싼 주변 조건 같은 것을 대충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2/4분기 중에 다시 3차회담을 하도록 합의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金德龍 위원님이나 秋美愛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HEU 프로그램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고리로 걸려서 앞으로 회담이 더 제대로 진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핵심은 중국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입장이고 또 우리도 북한의 프로그램 존재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고 의심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중국이 상당히 근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북한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조금 아까 파키스탄과 북한의 거래 이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그리고 중국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파키스탄과 북한과의 거래를 확인할 경우 아마 6자회담 가운데 북한을 빼놓고는 HEU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거의 공유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그 경우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리라고 봅니까?

상당히 몇 단계 더 진전된 이후의 얘기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에 계속 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섯 나라의 그와 같은 거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철수를 하든지 할 것인지, 어찌 되면 3차회담 정도에 가면서 올 연말의 미국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해서 이 회담이 굉장히 고비에 다다를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사결과가 제공이 되어서 더 이상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까?

○**이부영 위원** 중국까지 그런 것에 상당히 동의하고……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북한의 입장은 어떻

게 되겠느냐, 이것은 정부 입장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엑싯트 스트레티지(exit strategy)를 지금 마련했거나 아니면 마련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6자회담을 갖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혹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북측이 고농축우라늄 계획이 없다, 있다면 폐기하겠다. 다시 고농축우라늄이 없다. 그런데 있다면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델리커시(delicacy)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또 평화적 이용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엑싯트 스트레티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5개국도 그렇게 없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엑싯트 스트레티지를 마련하는데 6자회담이 매우 유용한 안전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6자회담의 이 안전판을 어떻게 잘 유용해서 이 계획을 폐기시키게 또 북한은 체면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만일 북한의 체면문제라고 한다면 6자회담 틀 안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회담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영 의원** 아까 파키스탄에서 핵시설, 기술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이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金德龍 위원이 어느 단계에서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경우 핵보유 선언을 할 경우 그때는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핵시설 도입이나 기술 도입 이런 것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서 HEU 프로그램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여서 핵무기 보유 단계까지 온 것은 이때까지 북한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파키스탄으로부터

그런 기술 도입, 물질 도입, 시설 도입 이런 것이 입증되고 6자회담 안의 다른 5개국들이 북한의 그런 HEU 프로그램의 존재나 HEU 추출 사실 자체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 경우 金德龍 위원의 그런 추론, 그런 쪽으로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을李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外交通商部次官補 李秀赫** 지금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현 단계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우라늄탄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무기도 포함해서 전부 다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다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수준 그런 것이 큰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상이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것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이 굴러가서 상황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동결 조치가 유용한 메커니즘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결하면 무기조차 동결해서 국제 감시하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는 어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못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까지도 국제 감시하에 두어야 됩니다.

○**이부영 위원** 올 한 해가 미국의 국내 정정, 이라크 사태와 연관되어서 이 6자회담도 큰 국제 정치의 틀 속에서 돌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애 많이 써 오셨지만 올 한 해 기간 안에도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김상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북핵 관련 6자회담 결과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통일부장관 입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북협력기금사용에관한보고

가. 통일부

(12시45분)

○**委員長 徐廷和** 의사일정 제3항 남북협력기금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존경하는 徐廷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의 남북경협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과 남북 간 직거래 활성화 문제 등을 주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통일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개성에서 개최된 경협 관련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일부로서는 예년과 같이 봄철 비료 20만t을 북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로 입주하게 될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투자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국민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번 2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13차 장관

급회담에서 우리 측의 대북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봄철 비료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 2월 25일 적십자 간 전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의 비료 지원이 북한의 식량 증산에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북한의 요청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원 규모는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복합비료 중심으로 20만t을 지원할까 합니다. 지원 시기는 봄철 시비기에 맞춰서 금년 4~5월 중에 수송·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적 주관으로 남북 적십자 간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따라서 추진될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구매·수송·인도경비 등 총 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비료 지원 완료 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문제입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주민돕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모범적인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협력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5억 원, 제작년에 54억 원, 2001년에 38억 원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해 왔습니다.

한편 UNICEF나 WHO 등 국제 유엔연합 산하 기구들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태와 어린이 영양상태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보건의료 그리고 농업개발 어린이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25개 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범위 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금년에는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단계별로 지원규모를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 및 어린이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WHO를 통해서 말라리아 방제사업에 약 90만 불 정도를 4월 중에, 좀 일찍 지원하면 금년도 남쪽 말라리아 발생 건수를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2002년도에는 좀 시기가 늦어 가지고 남쪽에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2~3만 건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일찍 서두른 결과로 1000건대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UNICEF의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약 100만 불 상당 정도를 상반기에 지원하면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관련 지원문제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단 건설을 위해서 초기 투자비 비중이 큰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용수 폐수 폐기물 등 기반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부담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이나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등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 해 왔습니다.

지금 개성공단도 물론 관할권은 북쪽에 있지만 입주대상 기업들이 주로 우리 기업들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용수 폐수 폐기물 및 간선도로 등 단지 내 시설에 대해서 실투입비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방식은 사업에 투입되는 실투자금액에 대해서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협력기금에서 약 47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분양가는 약 15만 원대로 내려올 수 있으리라고 희망합니다.

이상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통일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曹雄奎 委員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좋은데 북한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호의에 대해서 전연 화답 없이 엉뚱한 장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도

북한에 다녀온 몇 교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또 북한을 방문한 교수들에게 남한 내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활동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핵 개발은 핵 개발대로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북한사람들이 전연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쌀이니 비료니 포대를 보낸 것이 2000만 포대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없으니까 아마 집집마다 그것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도 써 있고 ‘대한’도 써 있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만큼 북한의 자유화라든가 북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우선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리고 이미 북한 내에도 6·15 선언 때 金大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주민들은 웅당 김정일이 다 알아서 얻어오는 것으로 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 내가 말을 차분히 하고 싶어도 하도 한심해서 말이 헛나가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우스워요.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북한에 호의를 베푸는지, 최소한 상응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상황이 전혀 안 보여요. 계속 뜯어가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6자 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만한 것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또 향후 어떤 결과가 보일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해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남 적화통일이라든가 선전이 라든가 전술, 이 모든 것을 볼 때 북한이 전연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주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내부에는 이념적으로 이상한 세력들이 대놓고 북한을 동조하고 북한과 코드를 맞춰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상황이 흘러 국민이 불안해져야 되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무엇을 내놔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그저 장관급 회담이다, 경추위 만났다 하면 북한에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신축적인 상호주의라든가 하는 것은 북한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요.

지난번 장관급 회담 때 나도 저녁초대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하는 얘기 뻔한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이 미국 잘못이고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들어보면 가당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갖다 줘야 되는지, 이제는 이것도 뭔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양보와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항시 이런 질의를 해도 장관 똑같은 대답이고, 아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연계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군축이라든가 재래식 무기를 후방 배치하는 것이라든가 또 배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든가 또 최소한도 북한이 평화 공조를 위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때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밤낮 우리가 되풀이해서 묻는 말인데 더 이상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보고 있기에는, 그리고 동의해 주기에는 너무 상황이 불안하고 국민들은……

오늘 보세요. 재외동포들이 투자했던 것 다 뽑아가는 게 1조 원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이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좀더 분명히 하시고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건져 주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로 갖고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 부문에서의 또는 정치이념이나 구호면에서의 변화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저희들은 밑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 또는 대남 간의 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비료 지원 관련해서 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한국이고 남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열두 번에

걸쳐서 열두 군대를 가서 확인하고 왔습시다마는 쌀 분배 결과에 대해서 녹음까지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훈련된 발언, 교육된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태풍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쌀을 보내주는 것은 역시 동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쌀이 3~4년 묵은 쌀이기 때문에 풀기는 떨어지지만 동포 아니면 누가 주겠는가, 밥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자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쌀포대 2000만 개 그다음에 비료포대 3000만 개가 한글로 인쇄된 것이 아깝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남쪽과의 마음의 끈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짧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북쪽의 공격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되는 기미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관급 회담에서 장성급 회담을 북쪽이 쉽게 받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 회담을 결국 받아서 3월 중에는 회담이 열리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이런 쌀이나 비료지원을 통해서 북쪽이 남쪽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런 우리의 요구를 북쪽이 수용했다고 생각할 때 물론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기준을 높이 설정하신 曹 위원님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시겠지만 그러나 중간 정도의 눈높이만 만든다면 조금은 더 기다려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연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원과 여러 가지 요구를 연계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동적으로 북쪽이 대북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연계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북쪽이 순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동·서독 관계에서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것을 거두어 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외동포들의, 재미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겠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부의 한반도

상황 내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홍보의 미숙 또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남북관계가 그나마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曹雄奎 委員 어쨌든 기록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정부의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제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이부영 위원님……

○이부영 위원 지난번에 장관급 회담 이후에 올 상반기 중에 좀더 여러 번 접촉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6자회담과 연계해서, 남북 간에 북한이 6자회담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이와 같은 장관급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림으로써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연화 내지 실질적으로 옮겨 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장성급 회담이 열린다고 그러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오늘부터는 경추위, 경제 회담입니다.

○이부영 위원 장성급 회담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쪽에서 아직 날짜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이부영 위원 그러면 남북해운협력 문제라든지 철도·도로 연결 접촉이 군사 부문에서의 회담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이런 것이 경제협력과 관계된 것이 바로 군사문제와도 연결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해운협력 또 철도·도로 연결이 군사적 긴장완화랄까 군사 부문에서의 접촉이 빈번하다 이럼으로써 긴장완화와도 분명히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아까 曹 위원님처럼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경제 부문 협력 또 군사 부문에서의 접촉의 확대, 이해의 확대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曹 위원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종의 정책이라고 할까 전략인

데 연계를 노골적으로 시키려고 할 경우에 결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데 반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협이라는 방식으로, 특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경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쪽의 군부가 경협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고 이번에 해운협력에서도 북쪽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제를 제시한 데 반해서 ‘통보하면 되지,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그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이고 허가를 해서 승인하는 조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감시라고 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조건에서 왕래를 하는 거기까지 지금 북쪽이 끌려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문제를 군사 맥락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성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운협력이라든지 개성공단 개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군사 부문의 협력을 촉구하고 그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위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네 변화해라 하는 것보다는 슬슬 얘기하면서 또는 협력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군사 부문에서의 긴장을 자기네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북쪽이 경계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내놓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의 변화는 남북협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군사 부문에서의 변화도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영 위원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선거도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북한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긴장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특히 曹 위원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참 조)

【결의안】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3. .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과거의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단절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희생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이 20세기 냉전의 잔재로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남북간의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의 상봉, 1만 8939명의 생사·주소 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상봉, 상호왕래 및 재결합 등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간에 흩어진 수백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 확인이 가장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며,

지난 1991년 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 1998년 1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 및 2000년 6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 등 대한민국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채택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위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

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20세기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 초래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분단은 전 민족적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정도임.

2003년 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수는 12만 2855명이며 신청자 1인당 찾고자 하는 평균가족수가 4~5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 이들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한 이산가족 규모는 약 60만 명 정도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나, 가족찾기를 포기한 이산가족의 경우 및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됨.

남북당국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이 상봉하고 1만 8939명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이산가족문제해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가족상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다수 이산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생사확인조차도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오히려 허탈감만 더해 주고 있음. 특히 가족의 생사확인에는 이산가족들의 가장 1차적인 염원으로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남북당국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 미흡 및 북한측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임.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의 경우에도 희망자에 비해 그 규모 및 횟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왕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남북당국이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확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出席委員(19人)

金 德 龍	김 상 현	金 容 甲	金 龍 煥
金 鍾 河	金 宗 鎬	孟 亨 奎	朴 相 千
朴 源 弘	徐 廷 和	安 相 賢	유 재 건
柳 興 洙	이 부 영	이 창 복	曹 雄 奎
秋 美 愛	河 舜 鳳	韓 昇 洙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姜 長 錫
전 문 위 원	金 容 九

○政府參席者

통 일 부

장	관	丁 世 鉉
기 획 관 리 실 장		黃 河 守
통 일 정 책 실 장		申 彦 祥
사 회 문 화 교 류 국 장		洪 在 亨
통 일 교 육 원 장		朴 聖 勳

외교통상부

차	관	崔 英 鎭
차 관 보		李 秀 赫
다 자 통 상 국 장		林 英 鹿